“양당정치 못 바꾸면 더 망가질 것”

‘통합’ 개혁신당 첫 최고위

“양당, 새로운 선택 여지 봉쇄… 기득권 유지” 민주·국힘에 날선 비판

이낙연 공동대표 “양당 독점구조 깨고 대화·타협의 정치 실현” 다짐

이준석 공동대표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 될 것” 선언

통합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저희 내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공동대표는 “30퍼센트 이상 국민은 ‘양당 모두 안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런 국민을 위해, 새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신당이 출범했다”며 “그런데도 양당은 그런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끝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이끈 젊은 당 대표를 모질게 핍박하고 민주당은 품격과 실력으로 당을 이끈 전직 당대표를 거칠게 공격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오늘의 인재를 아끼고 내일의 인재를 키워내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판결

핵심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

“균형발전 촉진 위해 역세권 개발·건지산로 개설 추진”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

전주 동·북부 균형발전

종합대책 7개항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동·북부권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개항의 전주 동·북부권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동부권 발전 전략 가운데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재추진이 담겼으며 이는 지난 2018년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 78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개발사업이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역사 신·증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낙후된 전주역사 뒷편을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동부권 시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시내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대단위 임대 단지는 이곳이 유일해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 청년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수렴된 호성동과 우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부권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조속히 건립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적합부지로는 공원일몰제로 매입해야 할 공원지역이나, 현 승마장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고질적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북부권의 유일한 간선도로인 송천대로 병목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지산로’ 개통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도로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대송장례식장을 연결하는 2.2km 길이다. 건지산 관통시 오송저수지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 지난 2017년 도로계획 자체가 폐지됐다.

정 예비후보는 에코시티 중심상업지구 옆에 방치돼 있는 기무사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받아 무상양여 받고,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미동 일대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주시민이면서도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외곽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평한 시민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1인 시위로 시작한 거리 위 180여일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작년 8월 현 정권 비판

시민들과 노하우도 공유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예비후보(전주병)가 출마 전 시작한 1인 시위부터 예비후보로서 아침 인사까지 시민들을 만난 지 180여일을 넘어섰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출퇴근 시간 황 후보의 1인 시위를 지켜본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각자 준비해온 피켓을 들기도 했으며, 황 후보가 직접 SNS에 ‘1인 시위 노하우’를 공유해 흥미를 끌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 퇴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

황 예비후보는 “출마하기 전부터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가 늘어나니 책임감이 생겼다”며 “지금은 출마 후보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현 정권의 무능력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는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지속 가능 농업복지·소득 중심 농정 실현’

민주 유성엽 예비후보, 농어축산 3대 목표 9대 실천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읍·고창)는 13일에 발표한 정책·공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복지와 소득 중심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축산업 분야에서의 3대 목표와 9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이 중 3대 목표는 ‘안심 경영 환경 최우선 지원 체계구축’, ‘생산중심 농정에서 판매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농생명 푸드테크 도입 및 기업육성’이라 전하였다. 각 목표는 구체적인 9대 실천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목표인 ‘안심 경영 환경 최우선 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가족농,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주농, 다문화가정농에 대한 최우선 지원, 보험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강화 및 확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밭 농업 직불제,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두번째 목표로 제시된 ‘판매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에서는 지자체(직영) 온·오프라인 ‘정읍·고창 보부상단’ 운영, 가공 부가가치 제품 개발시스템 구축(상품화지원센터 설립), 대도시 정읍·고창 로컬푸드 직영점 설치·운영 등을 약속했다.

세번째 목표로 제시된 ‘농생명 푸드테크 도입 및 기업육성’에서는 대규모 자립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및 인재 육성센터 구축, 중소농 푸드테크 전환 지원을 위한 협업과 네트워킹 확대, 어업 및 축산업 가공산업 테크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공약에 포함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선도농업’과 ‘선진농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식량위기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종농업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 복합영농을 통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농업을 실현해야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순환복합영농의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친환경농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피해를 줄이면서 축산을 진흥시킬 수 있는 ‘(가칭)순환복합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4월 국회의원 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전주를 정권교체 진원지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주을 재선 도전 공식화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을 원내로 진출시킨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전주를 정권교체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를 ‘무도한 정권, 정치테러가 일상화 되버린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독재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권교체를 이뤄내려면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된다. 필승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며 “야권 총단결을 통한 전략적 방향이자 정치개혁과 연합교체의 밑거름이 될 적임자로 강성희를 선택해 달라. 전주를 정권교체의 진원지로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강 의원은 파탄 난 민생과 전북의 자존심 회복을 또한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서글프고 애처로운 목소리, 한 맺힌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거부하고 부자감세 정책만 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서민부채를 탕감해서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 강성희는 300명 중의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전북도민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라며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총단결을 실현해내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선봉에서 전북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 내겠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저를 키워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강성희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힘, 시민들의 명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직 전주시민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부총리급 출산장려부 신설할 것”

민주 두세훈 예비후보, 총선 첫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예비후보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핵폭탄 보다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 지나지 않아 부총리급으로 강력한 집행권이 있는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부를 통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와 신혼주택을 제공, 양질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및 무제한 돌봄 제공 등을 제시했다.

두세훈 예비후보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예산들을 출산장려부에 일원화하고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출산장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출산장려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별취재반